

KLSI

ISSUE PAPER

제108호
2019-7호
(2019.05.22.)

www.klsi.org

한국의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추이 - 생산성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임금 없는 성장 -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목차]

1. 경과
2. 2000년 이후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추이
3. 1970년 이후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추이
4. 맺음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50(충정로3가, 골든브릿지빌딩) 3층

전화 02) 393-14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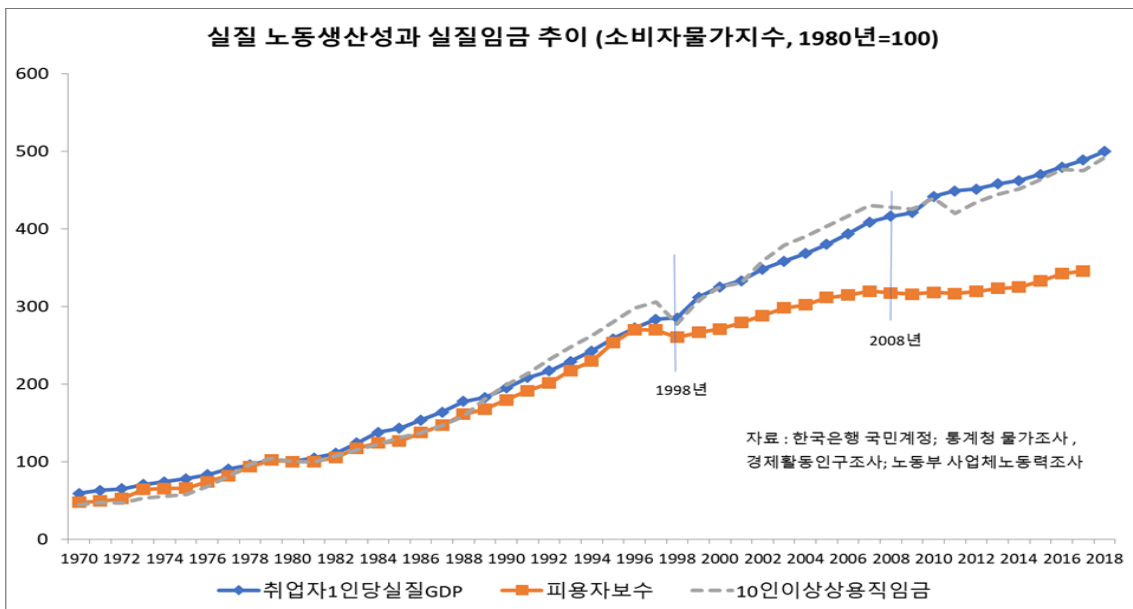
팩스 02) 393-4449

WWW.facebook.com/klsiedit

<요 약>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생산성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고,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생산성은 증가해도 임금은 상승하지 않는 ‘임금 없는 성장’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박정수(2019)는 2000년을 기준연도로 하고,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명목임금을 생산자물가지수로 나누어 실질임금을 계산한 뒤, 2000년 이후 생산성에 상응하는 실질임금 인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 박정수(2019)의 결정적 오류는 생산성은 전체 취업자 통계를 사용하면서, 임금은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통계를 사용한 점이다.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피용자 1인당 보수총액을 사용하면, 기준시점을 1980년으로 하든 2000년으로 하든, 물가지수로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든 생산자물가지수를 사용하든,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임금 없는 성장’이라는 한국 노동시장의 특징이 일관되게 발견된다.

[그림] 실질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1 추이(1970-2018년, 1980년=100)



- 문제는 선행 연구자들이 물가통계를 잘못 사용해서가 아니라, 박정수(2019)가 임금통계를 잘못 사용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문제는 물가통계가 아니라 임금통계야!”

한국의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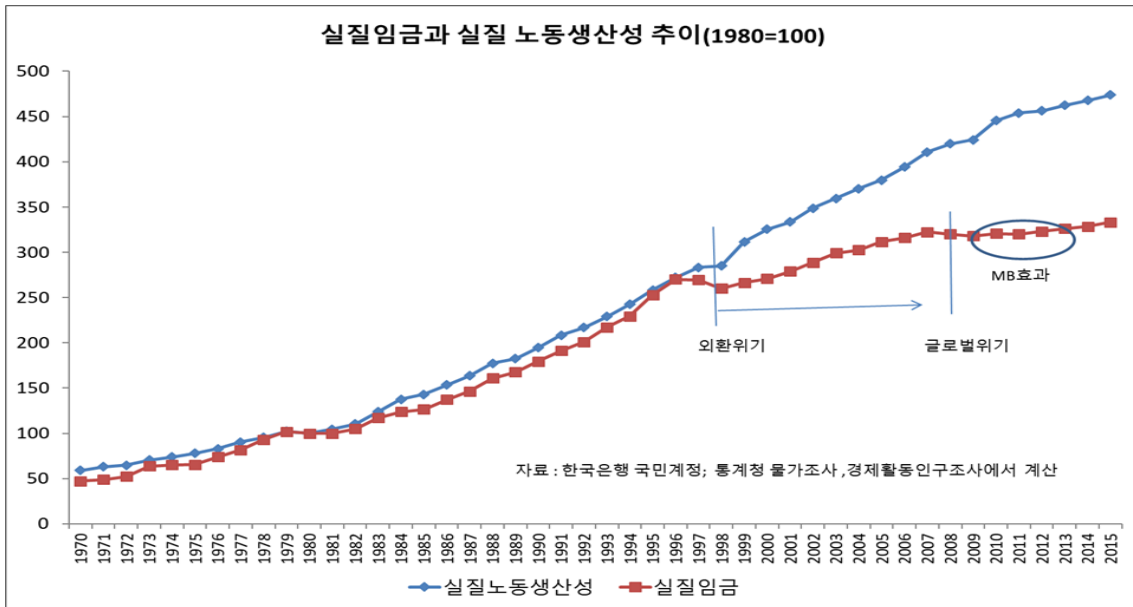
- 생산성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임금 없는 성장 -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1. 경과

-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도 실질임금인상률은 생산성증가율에 조금 못 미쳤다. 외환위기 이후 저임금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정규직도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이 이어지면서, 실질임금인상률과 생산성증가율 사이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고 글로벌 위기를 겪은 2008년 이후는 생산성은 증가해도 임금은 상승하지 않는 ‘임금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김유선, 2015).

[그림 1] 생산성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자료: 김유선(2015), [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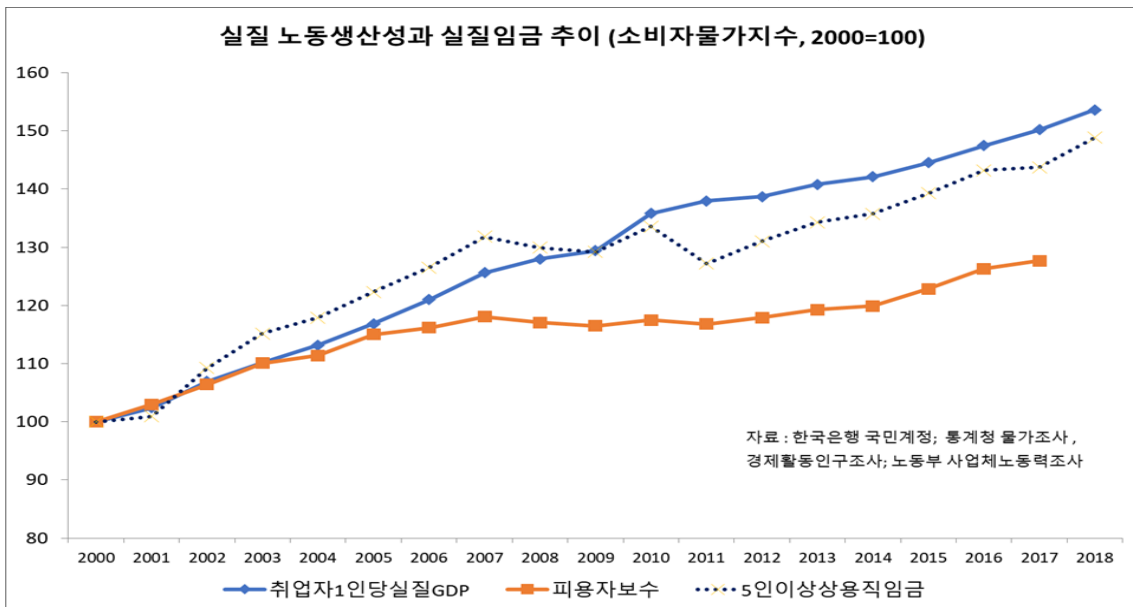
- 이러한 연구결과는 김유선(2015)에 한정되지 않는다. 박종규(2013; 2014), 홍장표(2015), 장하성(2015), Dabla-Norris 등(2015), ILO(2018)도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임금 없는 성장’이란 점에서 동일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박정수 2019).
- 박정수(2019)는 “한국 경제의 노동생산성과 임금”이란 논문에서, ‘2000년 이후 실질 임금인상률이 취업자당 실질GDP증가율에 못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는, 실질임금을 계산할 때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눴기 때문이다. 생산자물가지수(GDP 디플레이터)로 나뉜 실질임금을 계산하면, 생산성에 상응하는 임금인상이 이루어졌다. 생산성증가율에 비해 임금인상률이 낮았다는 잘못된 사실에 근거하여 취해진 기존의 정책들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보수언론은 박정수(2019)의 연구결과가 마치 소득주도성장론의 근거를 허문 것인 양 보도했고, 일부 경제학자들도 이에 편승했다.
- 노동연구자들 사이에서 실질임금을 계산할 때,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누는 것은 오랜 상식이다. 임금교섭에서 중요한 것은 실질구매력의 유지·개선이며, 정부와 재계가 주장해 온 생산성임금제도 이 점에선 마찬가지다.
- 뿐만 아니다. 박정수(2019)의 결정적인 오류는 생산성은 전체 취업자 통계를 사용하면서, 임금은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통계를 사용한 점이다. 5인 미만 사업체와 임시·일용직 노동자 임금과,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노동소득을 빠뜨린,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임금통계만으로 선부른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서울사회경제연구소가 주최한 심포지엄 발표문에서 주상영(2019)이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노동생산성을 계산할 때는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박정수(2019)가 임금인상률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으로 한정된 노동부 임금통계의 문제점을 바로잡으려면, 한국은행 국민계정에서 피용자보수총액을 임금노동자수로 나누어 피용자(임금노동자) 1인당 보수총액을 계산하면 된다. [그림 1]에서 실질임금은 피용자 1인당 보수총액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누어 계산한 것으로, 노동연구자들 사이에선 이미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은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노동소득은 피용자 보수총액에서도 빠진다는 점이다. 이들까지 포함하면 취업자 노동소득증가율은 더 낮아질 것이다. 하지만 피용자 보수총액 만으로도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노동소득)인상’을 충분

히 보여줄 수 있고, 보정방법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취업자 1인당 GDP증가율과 노동자 1인당 피용자보수증가율을 비교하도록 한다.

2. 2000년 이후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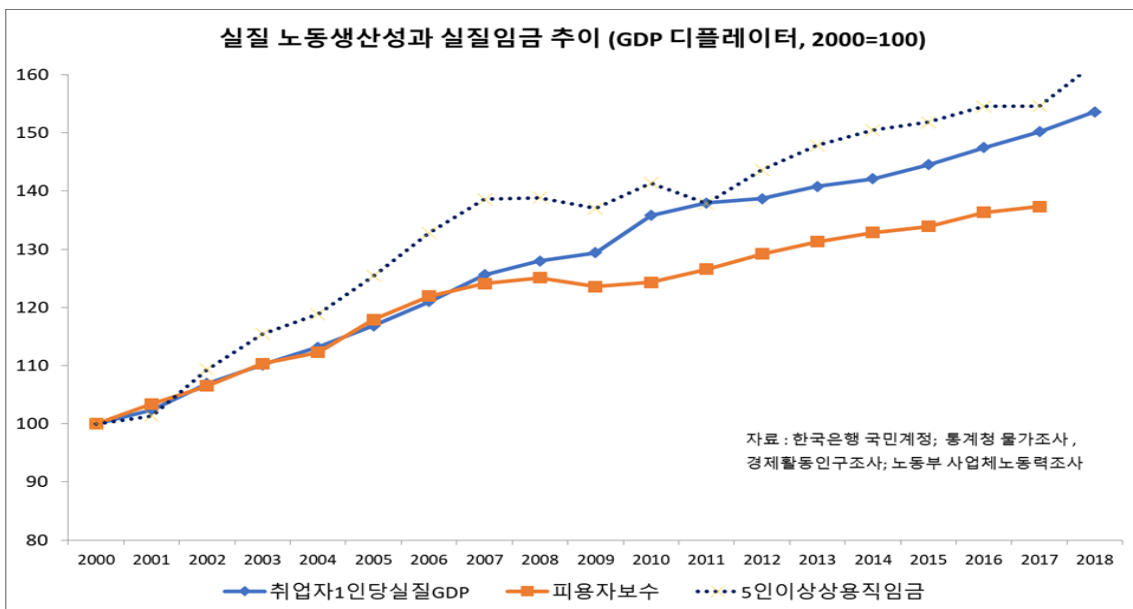
○ [그림 2]는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누어 실질임금을 계산했을 때 연도별 추이다. 2000년을 기준으로 할 때 노동생산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제자리걸음을 하고, 피용자 1인당 실질임금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통계를 사용하든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임금 없는 성장’이란 특징은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박종규(2013)는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실질임금을 사용했고, 김유선(2015)은 피용자 1인당 실질임금을 사용한 점에서만 차이가 날 뿐이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실질임금보다 피용자 1인당 실질임금 통계를 사용했을 때,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임금 없는 성장’이란 한국 노동시장의 특징이 확연하게 드러난다([그림 2]와 [표 1] 참조).

[그림 2] 실질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추이(2000-2018년, 2000년=100)



○ [그림 3]은 명목임금을 생산자물가지수(GDP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실질임금을 계산했을 때의 연도별 추이다.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실질임금이 노동생산성을 상회하고 있다. 박정수(2019)는 후자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용자 1인당 실질임금은 생산자물가지수를 사용하더라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그 뒤로도 생산성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박정수(2019)가 강조한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더라도 피용자 1인당 실질임금 통계를 사용하면,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임금 없는 성장’이란 한국 노동시장의 특징은 마찬가지로 관찰된다([그림 3]과 [표 1] 참조).

[그림 3] 실질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2 추이(2000-2018년, 2000년=100)



[표 1] 실질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추이(2000-2018년, 2000년=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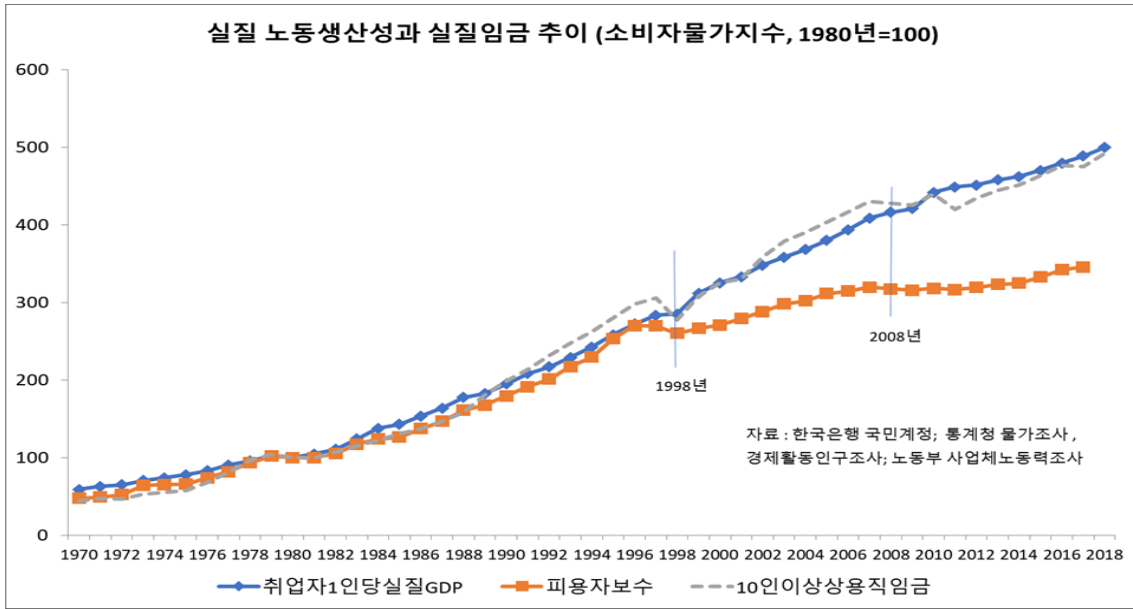
연도	취업자 1인당 실질GDP	물가지수		실질임금1 (소비자물가지수)		실질임금2 (GDP 디플레이터)	
		소비자 물가	GDP deflator	피용자 1인당 보수	5인이상 상용직 임금	피용자 1인당 보수	5인이상 상용직 임금
20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01	102	104	104	103	101	103	101
2002	107	107	107	106	109	107	109
2003	110	111	110	110	115	110	115
2004	113	115	114	111	118	112	119
2005	117	118	115	115	122	118	125
2006	121	120	115	116	126	122	133

연도	취업자 1인당 실질GDP	물가지수		실질임금1 (소비자물가지수)		실질임금2 (GDP 디플레이터)	
		소비자 물가	GDP deflator	피용자 1인당 보수	5인이상 상용직 임금	피용자 1인당 보수	5인이상 상용직 임금
2007	126	124	118	118	132	124	139
2008	128	129	121	117	130	125	139
2009	129	133	125	117	129	124	137
2010	136	137	129	117	134	124	141
2011	138	142	131	117	127	127	138
2012	139	145	133	118	131	129	144
2013	141	147	134	119	134	131	148
2014	142	149	135	120	136	133	150
2015	145	150	138	123	139	134	152
2016	147	152	141	126	143	136	155
2017	150	155	144	128	144	137	155
2018	154	157	144		149		162

3. 1970년 이후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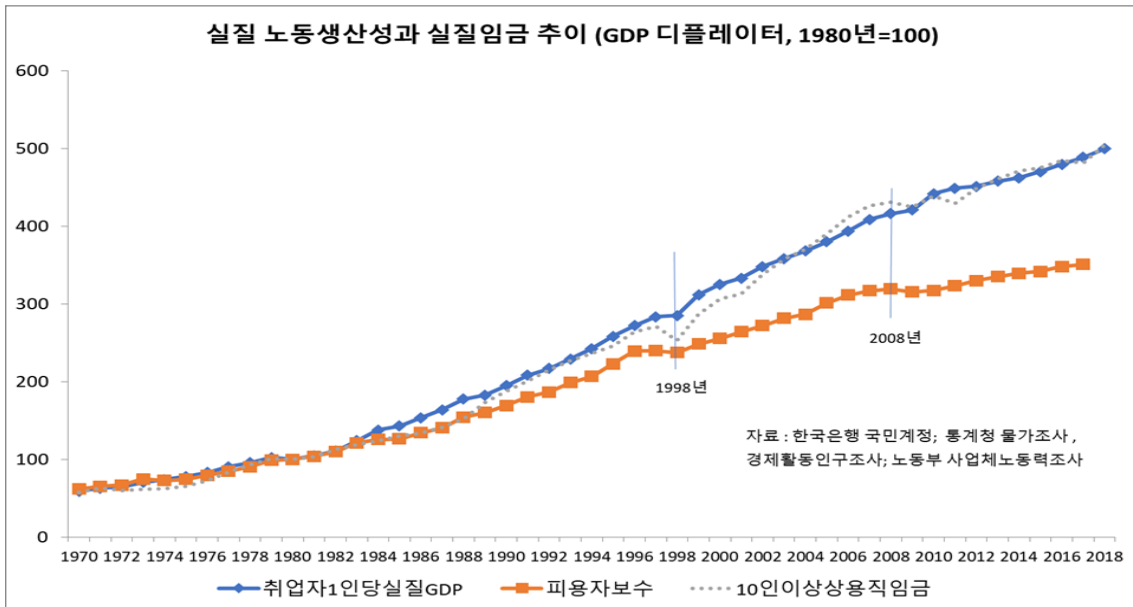
- 앞서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추이는 2000년을 기준연도로 한 것이다. 2000년은 실질임금이 크게 하락한 외환위기 직후여서, 그 이후 임금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장기 시계열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생긴다.
생산성과 임금통계는 1970년부터 자료가 축적되어 있다. GDP와 피용자보수는 한국은행 국민계정에서 구할 수 있고, 노동부 임금통계는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자료가 이용가능하다.
- [그림 4]와 [그림 5]에서 1970년부터 2018년까지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실질임금은, 물가통계로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했느냐 생산자물가지수를 사용했느냐에 관계없이, 큰 틀에서 노동생산성과 동반상승해 왔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해서 구한 피용자 1인당 실질임금(1)은 1998년 외환위기 직후부터, 생산자물가지수를 사용해 구한 피용자 1인당 실질임금(2)은 1980년대 중반부터, ‘성장애 못 미치는 임금인상’이 이루어졌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4] 실질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1) 추이(1970-2018년, 1980년=100)



주: 실질임금(1)=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해서 구한 피용자 1인당 실질임금.

[그림 5] 실질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2) 추이(1970-2018년, 1980년=100)



주: 실질임금(2)=생산자물가지수를 사용해 구한 피용자 1인당 실질임금.

4. 맺음말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생산성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고,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생산성은 증가해도 임금은 상승하지 않는 ‘임금 없는 성장’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박정수(2019)는 2000년을 기준연도로 하고,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명목임금을 생산자물가지수로 나누어 실질임금을 계산한 뒤, 2000년 이후 생산성에 상응하는 실질임금 인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 박정수(2019)의 결정적 오류는 생산성은 전체 취업자 통계를 사용하면서, 임금은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통계를 사용한 점이다.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피용자 1인당 보수총액을 사용하면, 기준시점을 1980년으로 하든 2000년으로 하든, 물가지수로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든 생산자물가지수를 사용하든,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임금 없는 성장’이라는 한국 노동시장의 특징이 일관되게 발견된다.
- 문제는 선행 연구자들이 물가통계를 잘못 사용해서가 아니라, 박정수(2019)가 임금통계를 잘못 사용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문제는 물가통계가 아니라 임금통계야!”

참고문헌

김유선(2015), 『한국의 노동 2016』,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정수(2019), “한국 경제의 노동생산성과 임금”, 한국경제포럼 제12권 제1호.

박종규(2013), 『한국경제의 구조적 과제: 임금 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의 역설』, 한국금융연구원.

주상영(2019.05), “한국 경제의 생산성, 임금, 노동소득분배율: 통계 해석 논란에 대한 견해”,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심포지엄: 문재인 정부 2년, 경제정책의 평가와 과제』, 서울사회경제연구소.